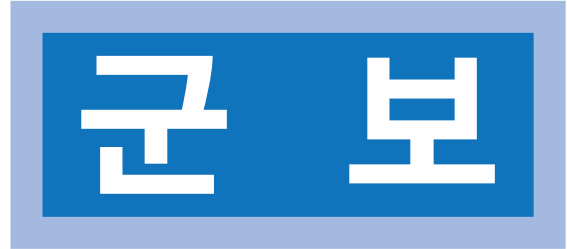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411호 2019. 2. 1(금)

입 법 예 고

장수군 공고 제 2019 - 83호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장수군 공고 제 2019 - 114호 장수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3
장수군 공고 제 2019 - 118호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57

고 시

장수군 고시 제 2019 - 12호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66
---	----

공 고

장수군 공고 제 2019 - 81호 장수군 공인 등록(폐기) 공고	69
장수군 공고 제 2019 - 102호 대형유흥재산 활용 지정제안 공모 공고	70

회 람								
--------	--	--	--	--	--	--	--	--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5)

장수군 공고 제 2019-83호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17.시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2018.4.17.시행)이 개정사항 중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부 미 반영된 부분을 반영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시정 안내 공문 : 행동강령과-3654(2018.11.28.)

나.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2018.12.24.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조항 개정(안 제5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구체화

*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 공무원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나. 직무수행 관련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조항 개정(안 제5조의6)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유형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2조 1
항 4호* 반영하여 구체화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과 관련한 사전·사후 신고 내용 및 기한 규정

*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다. 공직자 갑질의 개념, 갑질행위 유형*을 구체적 제시 및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3조의3)

* 민원업무 담당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직 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금지, 갑의 조직이익 목적의 직무관련자 및
하급기관에 대한 갑질 금지, 직무관련자 및 하급기관에 대한
포괄적·예비적 갑질 금지

라. 감독기관의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 금지 및 피
감기관의 거부조치* 등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감독기관 공무원의 부당한 지원요구, 과잉의전 제공요구 등 금지

*부당한 요구에 대한 피감독기관 공무원의 거부 의무 등

마.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 대상 행동기준에 행위기준 추가 개정(안 제 18조)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추가

바. 행동강령 교육에 대한 사항 개정(안 제22조)

－ 행동강령 교육의 주기 및 내용의 구체화(갑질행위 및 부당요구 내용 포함)

사. 기타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상 미반영 내용 등 반영

－ 외부강의등 신고 및 초과 사례금 반환에 대한 내용 구체화(안 제 15조)

－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내용 구체화(안 제21조)

3. 관련법규

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3조의3, 제14조의2, 제15조, 제21조

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2, 제23조, 제24조

4. 금후계획

가.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및 규칙안 입법예고 : 2019. 1월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 2월

다. 규칙 공포 및 시행 : 2019. 3월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수(기획조정실장)
- 팩스 : 063-350-5702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전화 063-350-2058)으로 문의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규칙 제 호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의6제1항 본문 중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을 “자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를 “군수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제5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사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13조의3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 및 부서(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및 부서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 및 부서(이하 이 조에서 “피감독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이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이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일”을 “2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별지 제13호서식” 을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 을 “제6항 또는 제8항” 으로, “별지 제14호서식” 을 “별지 제15호 서식”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5호서식” 을 “별지 제16호 서식”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금품등의 수수” 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로, “처리” 를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 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지 제16호서식” 을 “별지 제18호서식”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7호서식” 을 “별지 제19호 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4호서식” 을 “별지 제15호 서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인도하거” 를 “인도하거”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2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 · 감사 · 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기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 · 부패 · 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 · 제출 ·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 · 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 · 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 · 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9.1.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p>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p> <p>20 . . .</p> <p>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 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 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 장소	처리 결과	처리 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u>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신 설〉	3. <u>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 ----- ----- <u>자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u>군수에게</u> ----- ----- -----.
〈신 설〉	1. <u>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u>
〈신 설〉	2. <u>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u>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신 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p> <p>〈신 설〉</p>	<p>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p> <p>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 다)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사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p> <p>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p> <p>2.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p> <p>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u></p> <p>4. <u>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u></p> <p>5. <u>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u></p> <p>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u>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 및 부서(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 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및 부서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 및 부서(이하 이 조에서 “피감독기관” 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u></p> <p>1. <u>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u></p> <p>2. <u>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이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세미나 ·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 강연 ·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군수에게 미리 <u>별지 제12호서식</u>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 부터 <u>5일</u>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④ (생 략)</p> <p>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u>별지 제13호서식</u>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p> <p>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u>별지 제14호서식</u>에 의하여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p> <p>-----</p> <p>----- <u>한다</u> -----</p> <p>-----</p> <p>-----.</p> <p>② -----</p> <p>----- <u>별지 제13호 서식</u> -----.</p> <p>-----.</p> <p>③ -----</p> <p>-----</p> <p>----- <u>2일</u> -----</p> <p>-----.</p> <p>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⑥ -----</p> <p>----- <u>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u>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u>별지 제14호 서식</u> -----.</p> <p>⑨ ----- <u>제6항 또는 제8항</u> -----</p> <p>----- <u>별지 제15호 서식</u> -----</p> <p>-----.</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⑦ (생 략)</p> <p>〈신 설〉</p> <p>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군수에게 미리 <u>별지 제15호서식</u>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② ~ ⑤ (생 략)</p> <p>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공무원은 알선·청탁, 급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p>	<p>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⑩ (현행 제7항과 같음)</p> <p>⑧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 ----- ----- ----- ----- ----- ----- <u>별지 제16호 서식</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 <u>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급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u>----- <u>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p> <p>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u>별지 제16호서식</u>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 략)</p> <p>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별지 <u>제17호서식</u>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② (생 략)</p> <p>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u>별지 제14호서식</u>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 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 지 <u>제18호서식</u>에 따라 <u>인도하거나</u>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u>17호 서식</u>에 따라 <u>상담내용을 관리</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별지 제18호서식</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 <u>별지 제19호 서식</u>-----.</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별지 제15호 서식</u>----- -----.</p> <p>④ ----- ----- ----- -- <u>인도하거</u>----- -----.</p> <p>1. <u>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u></p> <p>2. <u>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p> <p>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p> <p>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p> <p>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p> <p>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p> <p>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p>
<p>〈신 설〉</p>	<p>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관계법규**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

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 16.]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

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 12. 24.]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 9. 27.]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16. 9. 27.]

관계법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2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의 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이나 제3항, 「지방의회의원 행

동강령」 제14조제2항이나 제3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7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7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8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때에는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검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는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5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5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제2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33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33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

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3조(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말한다)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장수군 공고 제 2019-114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 각종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명시적 근거 마련
- 기존 사업의 변경 및 폐지와 신규 추진사업 반영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및 용어의 정리(안제2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의 변경(안제7조)
-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농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지원 범위 확대(안제14조, 제15조)
- 농촌융복합산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신설 및 용어의 정리 (안제16조, 안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18일 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농업정책과)
- 2) 팩 스 : 063-350-2361
- 3) E-mail : yeskm@korea.kr
- 4)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담당자(전화 : 063-350-23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단체

제2조제6호 및 제7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를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명을”을 “1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5호 중 “축산농가의 소득기반시설 확충을 위한”을 “축산농가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한 우량한우 구입,” 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포장재” 를 “출하박스 생산시설, 포장재”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2호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11.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 산업 육성 및 지원
12.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공동선별비, 물류비 및 마케팅 지원사업

제15조제6호(중전의 제8호) 중 “장수군 농산물” 을 “농산물”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9호) 및 제8호(중전의 제10호) 중 “지역 농·특산물” 을 각각 “농·특산물” 로,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10호) 중 “홍보지원” 을 “홍보지원, 택배비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장수한우” 를 “안전 축산물 생산” 으로, “무항생제 한우 인증지원 및” 을 “친환경 인증비 및 장려금,”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방역을 위한 시설·기자재, 장비,약품, 컨설팅, 각종 방역업무 추진수당, 살처분 사체처리 및 교육지원

제15조제17호 중 “위한” 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그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가축개량 및 우량한우 구입 지원사업

제15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한 이자자책 보전 및 입식비 지원사업

제15조제24호 중 “시범사업” 을 “시범사업, 교육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축분처리 및 운송비, 살포비등의 지원사업

제1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승마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 지원사업

제16조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지역 농·특산물”을 “농·특산물”로, “활성화를 위한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장수군 대표축제 및 지역개발형”을 “장수군”으로 한다.

제17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5. “농업관련단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5. ----- -----.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정한 농업인단체 및 그 산하단체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
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에서 정한 단체	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단체
다. 라. (생략)	다. 라. (현행과 같음)
6.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6.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
7. “농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8. “식품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 -----.
9. 10. (생략)	9. 10.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구성) ① ----- -- <u>1명</u> 을 ----- -----.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다음 각호의 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② ----- 부위원장-----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영세하고 고령화된 농업인의 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등)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축산농가의 소득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축사신축 및 개보수, 기계·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u>	5. <u>축산농가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우량한우 구입.</u> ----- ---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제15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	제15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 · 특산물 및 가공품의 상품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포장재 및 출하박스 지원사업	2. ----- ----- 출하박스 생산시설, 포장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쌀 생산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장수군 농산물의 마케팅 및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	〈삭 제〉
7. (생 략)	5. (현행 제7호와 같음)
8. 장수군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 기자재 및 원료매입 지원	6. <u>농산물</u> -----
9. 지역 농 · 특산물 유통 · 판매시설의 시설 지원과 현대화를 위한 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 사업	7. <u>농 · 특산물</u> ----- ----- --
〈신 설〉	10.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
10. 지역 농 · 특산물의 판매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홍보지원 사업	8. <u>농 · 특산물</u> ----- ----- 홍보지원, 택배비 지원 --
〈신 설〉	11.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 산업 육성 및 지원
〈신 설〉	12. <u>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공동선별비, 물류비 및 마케팅 지원사업</u>
11. (생 략)	9.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13. <u>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그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u>	〈삭 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기자재 지원</p> <p>14.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을 위한 무항생제 한우 인증지원 및 우량정액, 수정란이식 지원</p> <p>15. (생 락)</p> <p>16. 가축 개량을 위한 지원사업</p> <p>17.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및 폴사료 종자공급, 조사료 재배단지 지원사업</p> <p>〈신 설〉</p> <p>18. (생 락)</p> <p>19.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 방역을 위한 시설·기자재 및 약품 지원사업</p> <p>20. (생 락)</p> <p>21. 승마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 지원사업</p> <p>22. · 23. (생 락)</p> <p>24. 곤충산업 등 신소득 작목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보급 사업 및 시범사업</p> <p>〈신 설〉</p> <p>제16조(농촌융복합산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과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p>	<p>14. ----- 안전 축산물 생산 ----- 친환경 인증비 및 장려금, -----</p> <p>15. (현행과 같음)</p> <p>16.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방역을 위한 시설·기자재, 장비, 약품, 컨설팅, 각종 방역업무 추진수당, 살처분 사체처리 및 교육지원</p> <p>17. -----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그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p> <p>18. 가축개량 및 우량한우 구입 지원사업</p> <p>19. (현행 제18호와 같음)</p> <p>〈삭 제〉</p> <p>20. (현행과 같음)</p> <p>21.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한 이자자책 보전 및 입식비 지원사업</p> <p>22. · 23. (현행과 같음)</p> <p>24. -----</p> <p>----- 시범사업, 교육사업</p> <p>25.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축분처리 및 운송비, 살포비등의 지원사업</p> <p>제16조(농촌융복합산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p> <p>-----</p> <p>-----</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진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p>1. <u>농촌융복합산업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지원센터 구성과 관련한 설치·운영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u></p> <p>2. <u>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수한우량 사과량 축제 추진 및 지원</u></p> <p>〈신 설〉</p> <p>3. <u>장수군 대표축제 및 지역개발형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전시관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u></p> <p>4. (생 략)</p> <p>제17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농업인 농작업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사 지원사업</u></p> <p>〈신 설〉</p> <p>3. ~ 7. (생 략)</p>	<p>-----</p> <p>-----</p> <p>----.</p> <p>〈삭 제〉</p> <p>1. <u>농·특산물</u>-----</p> <p>----- <u>활성화</u> -----</p> <p>-----</p> <p>3. <u>승마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 지원사업</u></p> <p>2. <u>장수군</u> -----</p> <p>-----</p> <p>-----</p> <p>4. (현행과 같음)</p> <p>제17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7. <u>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u></p> <p>2. ~ 6.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p>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 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수군이 지원하는 시책 및 권장하는 사업이나 국고의 재원에 의존하지 않는 군 자체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5. “농업관련단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정한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
 - 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단체
 - 다. 전국적 규모를 갖추고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
 - 라.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규정하는 4에이치 단체

6.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7.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9.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 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체험·휴양서비스·정보·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10.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촌융복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내 농업경영체, 농업관련단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제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발전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목표
2. 농림축산산업, 농어촌지역 개발 및 삶의 질 향상, 식품산업육성, 지역 역량강화 등을 위한 분야별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략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제5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7조(구성)

-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 ③ 위원 위촉 시에는 성(性)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 ⑤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 및 기관단체장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 또는 임기내로 하고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세부사업의 결정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분야별 지원

제12조(기본원칙)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지원
2. 농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화와 농·특산물의 가공·판매 증진
3.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농촌융복합산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
4. 농업·농촌의 개발 및 농업인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제13조(지원범위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관내 농업·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전라북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영세하고 고령화된 농업인의 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득작목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2. 일반원예작물 및 특용작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 지원과 생산농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사업

3. 과수 농가 육성 및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신규과원조성 사업
4. 고품질 안전한 과수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5. 축산농가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우량한우 구입, 축사신축 및 개보수, 기계·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6.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 및 생산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 지원사업
7.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승용마 육성 농가 지원사업

제15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 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상품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출하박스 생산시설, 포장재 및 출하박스 지원사업
3. 쌀 생산농업인의 생력화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
4.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력 증진사업
5. 지역 농·특산물 생산 농가 및 단체, 가공업체의 각종 박람회, 물산전, 직거래, 체험 행사의 참가 및 운영 지원
6.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기자재 및 원료매입 지원
7. 농·특산물 유통·판매시설의 시설지원과 현대화를 위한 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사업
8.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홍보지원, 택배비 지원 사업
9. 농·특산물의 온라인 종합쇼핑몰의 구축·운영 및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10.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11.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 산업 육성 및 지원
12.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공동선별비, 물류비 및 마케팅 지원사업
1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및 폐축사 철거·정비 지원사업
14.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육성을 위한 친환경 인증비 및 장려금, 우량정액, 수정란이식 지원

15. 장수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구충 및 광물질 보급사업
16.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방역을 위한 시설·기자재, 장비,약품, 컨설팅, 각종 방역업무 추진수당, 살처분 사체처리 및 교육지원
17.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그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및 풀사료 종자공급, 조사료 재배단지 지원사업
18. 가축개량 및 우량한우 구입 지원사업
19.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20.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21.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한 이자자책 보전 및 입식비 지원사업
22.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소규모 농기계 및 영농기자재 지원사업
23.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24. 곤충산업 등 신소득 작목의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보급 사업 및 시범사업, 교육사업
25.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축분처리 및 운송비, 살포비등의 지원사업

제16조(농촌융복합산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과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지원
2. 장수군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전시관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승마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 지원사업
4. 농촌 민박 서비스 향상 및 안전 등에 관한 사업

제17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장수마을 조성사업
2. 농업에 이용되는 마을 공공시설의 수리 및 보수 지원사업
3.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4.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및 농어촌 영유아 보육 지원사업
5.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 지원
6. 이주여성 농업인 등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7.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제18조(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역량강화와 소득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기술의 보급, 병해충 예방, 농업재해 예방, 농업행정 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사업
3. 농업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교육·도농교류·농산물 직거래 지원 및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지원사업
4. 농업관련 단체의 중앙·도 단위행사 참가 및 운영 지원사업
5.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대한 선진 국·내외 교육 및 연수의 지원
6. 농업·농촌 기술보급과 교육훈련 사업의 학술용역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제19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및 농작물과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험, 공제 등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 금액의 지원
2. 농업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시설 및 가축·농경지등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에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지원

제4장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제20조(지원신청)

- ① 농업경영체, 농업관련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대상자의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① 군수는 지원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읍·면장 및 농업경영체, 농업관련단체,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보조(융자)금 지급신청서를 해당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금의 지급 대상의 결정, 지급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보조금의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앞서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장수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사후관리)

- ① 군수와 읍·면장은 농업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당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과 해당 보조금의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는 「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장수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 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 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 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 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 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 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 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 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장수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신설 2016. 10. 28.>

장수군 공고 제 2019 - 118호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장 수 군 수

□ 자치법규명

-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정이유

- 장수사랑상품권의 할인지급과 모바일상품권 발행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자본의 타 도시 유출을 막고 지경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다른법령과의 관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장수사랑상품권 발행 등 운영계획(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가맹점 · 사용자 준수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상품권 발행, 운영위탁 및 상품권 활성화 지원 등(안 제13조부터 제19조 까지)

□ 참고사항

- 입법예고 : 군보게제 익일부터 20일간
- 예산수반여부 : 여

□ 의견제출

-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붙임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일자리경제과)
- 팩 스 : 063-350-570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350-2182에 문의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의 육성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수군수가 발행하는 장수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사랑 상품권” (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장수군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 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 이란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개별가맹점 :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 나. 환전대행가맹점 :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자
4. “사용자” 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장수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장수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할 수 있다.

- ② 상품권 사용자는 장수군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의 “사행산업” 및 동법 동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장수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제13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한시적으로 할인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며 또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장수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환수 조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행된 상품권은 이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으로 보며,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또한 이 조례에 따라 체결 및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장수군 고시 제 2019 - 12호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1월 18 일

장 수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장계 명진로(소로2-9호/소로2-23호) :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명 칭	사업규모	비고
군계획시설사업(도로)	장계 명진로 개설사업 (소로2-9호, 소로2-23호)	도로개설 L=305m, B=8m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장수군수
-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2019.12.3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불 임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가. 장계 명진로 개설사업(소로2-9호, 소로2-23)-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장계면 장계리	188-3 (188)	전	75	75	김인승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67번길 23(우산동)		
2	장계면 장계리	190-7 (190-6)	답	1	1	양정숙	장계면 장계리 189-3 명진로알맨션 104		
3	장계면 장계리	194-5 (194-3)	전	131	131	손영미	장계면 장계리 292-6		
4	장계면 장계리	194-6 (194-4)	전	257	257	손영미	장계면 장계리 292-6		

나. 장계 명진로 개설사업(소로2-9,2-23호)-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수량	소 유 자		이용 방법
						번호	주 소	
1	장계면 장계리	185-9 (185-1)	전	비닐 하우스	110㎡	육광수	장계면 중동1길 21	전
2	장계면 장계리	185-9 (185-1)	전	철조망 울타리	1식	육광수	장계면 중동1길 21	전
3	장계면 장계리	187-6 (187-2)	전	비닐하우스 (3동)	174㎡	육광수	장계면 중동1길 21	전
4	장계면 장계리	194-6 (194-4)	전	사과나무	276㎡	김춘희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한들로 44, 305호 (명진로알맨션)	전
5	장계면 장계리	194-5 (194-3)	전	사과나무	124㎡	김춘희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한들로 44, 305호 (명진로알맨션)	전
6	장계면 장계리	194-5 (194-3)	전	철재웬스	1식	김춘희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한들로 44, 305호 (명진로알맨션)	

장수군 공고 제2019-81호


장수군 공인 등록(폐기) 공고

장수군 공인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공인등록(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장 수 군 수

1. 등록(폐기)사유 :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로 인한 공인폐기
2. 폐기년월일 : 2019. 1. 22.
3.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고
폐기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출납원인	1.8cm 정방형		

장수군 공고 제2019 - 102호

대형유희재산 활용 지정제안 공모 공고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대형유희재산을 활용한 지정 발전 제안을 공모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유희재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공유재산의 효용가치 증대 도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수군 지정 발전 제안을 공고합니다.

2019. 1. 28.

장 수 군 수

1. 접수기간 : 2월 ~ 3월
2. 제안자 자격 : 누구나 가능
3. 제안서 접수처 : 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4. 제안내용
 - 군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방안
 - 국가공모 사업과 연계하여 국가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계획(안)
 - 군 세입 증대방안
 - 군정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5.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제안의 실시 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 진정 · 비판 ·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제출서류 : 제안서 별지 서식

※첨부서류 (각 1부)

- 예산절감 및 조세수익 증대액 산출 내역서 (필요시)
- 유희재산을 활용한 국가공모사업 계획서 (필요시)
- 설계도, 사진등 참고자료(필요시)

7.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 금 상 : 1제안당 100만원상당의 시상금품
- 은 상 : 1제안당 70만원상당의 시상금품
- 동 상 : 1제안당 50만원상당의 시상금품
- 장려상 : 1제안당 30만원상당의 시상금품

8.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자는 채택된 제안에 대한 제반 권리를 군에 양도하여야 하며 개인명의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출원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문의처 : 장수군청 재무과 ☎ (063) 350-2246】

[별지 제1호서식]

대형유후재산 지정 발전제안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제 목					
현 황 및 문 제 점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기대효과					
성 명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		
주 소	주소 :		직업 (근무처)		
	출신 읍·면(출향민의 경우) :				

- ※ 붙임자료 : 1. 제안내용설명서
2. 유후재산을 활용한 국가공모사업 계획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조세수입증대액 산출 내역서
4. 참고자료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